

전남 서남권 조선업계와 정책간담회 개최

친환경 전기추진선박·AI 제조 클러스터 등 4대 과제 적극 검토

- 민주당 선대위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 공동주최

조선업계 정책제안서 전달식 열려

- 대불산단을 전기 동력 선박제조 클러스터 방산 MRO(정비수리) 특구로 조성 건의

안도걸 의원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입주 조선업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대불경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안도걸·서삼석·김원이 국회의원과 방희선·주시형·나주몽 교수 등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의 방산 MRO 특구 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조선업계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추진선박을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근해 운행선박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불공단은 전기추진선박 제조의 최적지”라며, “대불산단을 전기추진선박 전용 산단 특구로 지정해서 전기추진선박 제조를 미래 조선업의 경쟁우위 분야로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둘째, “미국과 해군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면서 미국 군함의 수리·정비를 전담할 조선기지, 즉 MRO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목포에 입지할 예정인 해경선박 정비창에 근접한 대불산단을 MRO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조선업계는 “조선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대불산단 종사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60%를 초과한 상황에서, AI 기반의 통역과 작업처리시스템 구축, 교육을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 안전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넷째, “대불산단에 입주한 중소조선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선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협동 로봇 도입 등 제조 공정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AI로봇 실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은 “조선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인 전남 서남권의 핵심 산업으로, 지역 생존과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며, “서남권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공약에 반영하고 향후 입법 및 예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사 사진]





